

‘공소시효 D-2’ 검찰 6·1 지방선거 관련 수사

도내 지자체장 희비 엇갈려

전주시검, 정헌율 익산시장 등 4명 재판에 넘겨
우범기 전주시장 등 2명은 ‘혐의없음’ 처분
조만간 이학수 정읍시장 기소여부 결정 방침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 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12월 1일)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전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9일 전주시검 등에 따르면 도내 7명의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중 6명은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됐고, 1명은 금품살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최근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정헌율 익산시장, 김임준 군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2013년 동료 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5월 24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를 김임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최경식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광대 소방화바사를 취득했음에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단체장이 기소되자 지역 정가는 침뚫힌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과 익산시는 기소 이후 검찰의 공소 사실 여부에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익산시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익산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재무자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검찰의

결정에 정면 반박했다. 반면 우범기 전주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전주시와 순창군에서는 “잘아셨다”는 내부 기록이 포착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조만간 기소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시 당선 무효가 된다. 선출직으로서는 공직선거법이 가장 무서운 법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단체장들이 고소·고발이 되었을 경우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했다. 전국 10대 로펌을 고용하고, 이른바 ‘전관’ 출신 변호사 등도 마다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으러 왔다”고 귀띔했다. 특히 최경식 시장의 경우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현안대 허위허락 논란’과 민주당 중앙당 정치경력 논란 등이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최 시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조남관(57·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역에서는 ‘전관여우’의 흑도 제기했다. /뉴스1



전북청소년운영위원회연합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청소년 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광주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예산 편성 부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국가공모 탈락 광주에 예산 배정? 안될말”

도내 청소년단체, “국립호남권치료재활센터 예산 편성 매우 부당
예산 승인될 경우 260여 지자체에 매우 불공정한 선례”

전북지역 청소년단체들이 정당한 국가공모 절차에서 탈락한 광주청소년 치료재활센터의 재추진 움직임에 단단히 화가 났다. 전북청소년운영위원회연합회와 전북청소년원팀협의회 등 도내 12개 청소년단체는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가족부 공모 절차를 통해 국립호남권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편성은 매우 부당하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지정공모사업으로 익산시의 광주광역시 경쟁해서 최종 익산시가 선정됐음에도 광주광역시는 정치권을 이용해 국회 예결위에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 160억원을 요구하고 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해 추진하려고 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호남권청소년치료재활센터 공모

당시 주 수요권을 호남권으로 정했다. 그러나 광주는 또다시 광주, 전남 제주시 수요권으로 주장하며 익산시를 전북과 충청을 수요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정당하지 않으며 공모의 방식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다”고 덧붙였다. 지역 청소년단체는 “최근 광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공정과 상식, 원칙에 근거해 실시된 국가 공모사업의 정책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립호남권청소년치료재활센터 규모 및 일자리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정치적 힘의 논리가 적용될 것이 우려된다”며 “호남권에 2개 기관이 건립될 경우, 광주는 수요권이 익산보다 더 많고 주장하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공모를 통해 최종 확정된 익산의 규모는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뉴스1

전북 청소년단체는 “국가의 모든 공모 사업에는 시기와 절차가 있으며, 거기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동력을 잃지 않아야 하며, 우선 순위가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다”라며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은 공정과 상식에 의한 절차를 수용했던 광주가 전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익산시와 전북도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이 승인될 경우에 260여 지자체에 매우 불공정한 선례를 남기는 일하기에 우리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립호남권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지난해부터 익산과 광주가 건립 지역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과 각축전을 벌인 결과, 지난 8월 익산시가 최종 선정돼 익산시 합의를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2020년까지 국비 220억원을 들여 상담실, 심리검사실, 직업교육실, 체육관, 기숙사 등을 갖춘 시설을 건립해 위기 청소년 보호와 치료, 교육, 자립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뉴스1

전북 화물노조의 삭발 투쟁

“정부 업무개시명령 따를 수 없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따를 수 없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노동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 파업에 돌입한 지 여섯째인 29일 오후 2시 군산시 3부두 앞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노조원 350여명(경찰 추산)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규탄과 함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와 교섭에서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해 협의를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며 “국토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타협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본부장은 정부에게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안전운임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는데 우리는 이 명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부는 파업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노

조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파업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멈추면 세상은 멈추게 돼 있다”면서 “정부가 우리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더 가열차게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29일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본부장은 정부에게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안전운임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국토부와 교섭서 협의했으나 결국 결렬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파업사태 해결 의지 있는지 묻고 싶어”



“정부 반헌법적 업무개시 명령 강력 규탄”

진보당 도당, 성명서 발표

진보당 전북도당(이하 ‘도당’)이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당은 “윤석열 정권이 기어코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업무개시 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작태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도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사법적 협박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한국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

의 권익 증진을 위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파업은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이 낮아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에서 시작됐다”며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협박과 압포가 아니라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윤석열 정권은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채 노동자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업무개시 명령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일렷다. /김경수 기자

“유례없는 부실투성이에 위험천만한 핵발전소”

부안군의회,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

부안군의회가 2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한 박태수 의원은 “한빛 4호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실투성이인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라며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동과 관련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어떤 견수령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 이상 멈춰있던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부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뉴스1

섬 발전 · 주민 삶의 질 향상 근거 마련

김태창 도의원, 기본 조례안 발의... 종합계획 수립 등 담야

전북도의회 김태창 의원(군산 1)이 전북도 내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섬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과 종합계획 수립, 섬의 날 기념행사 추진 섬 발전전문위원회·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개별 섬 지역의 특성 반영·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섬 발전 정책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창 의원은 “도내 섬들은 관광·해양·생태자원이 풍부해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며 “전라북도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섬 발전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고 12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민주, 이상민 해임 2일 처리서 “적절한 시점·방식 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와 관련해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해임건의이라는 방식과 1일 본회의 보고 뒤 2일 본회의 처리라는 시점을 언급한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발의하고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상황과 달라진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아직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등 거부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이 보류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류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보류는 아니고 해임건의안까지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뉴스1

도내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제정

김정수 도의원, 의병운동 정신 기리기 위해... 자료 수집 등 실시

전북도의회 김 정수 의원(운영위원장 익산2)이 전북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정수 의원이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또 전라북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해,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수 기자